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국내 · 외 여성통신

- 해외
- 국내



해외*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국제언론인센터(ICF) · 유네스코(UNESCO), 여성 저널리스트에 대한 온라인 폭력 문제 심각 지적¹⁾

- 여성 저널리스트에 대한 온라인 폭력 문제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오프라인 폭력으로 이어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제언론인센터(International Center of Journalists, 이하 ICF)와 유네스코(UNESCO)가 지난 11월 25일 세계 여성 폭력 철폐의 날을 맞아 실시한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75%의 여성 언론인이 온라인 학대나 괴롭힘, 위협 또는 공격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어 설문조사에 답한 여성 언론인 및 미디어 분야 종사자의 20%가 오프라인 학대와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오프라인 공격이 이미 자신이 경험한 온라인 폭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응답했다.
-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국제언론인센터(ICF)와 유네스코(UNESCO)가 진행 중인 연구의 한 과정으로 진행됐다. 5개 언어(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 진행됐으며, 설문 조사에는 전 세계 1,210명의 여성 저널리스트 및 미디어 종사자가 참여했다. 조사 기간은 2020년 9월 중순부터 7주간 진행되었다. 응답자는 전문 저널리즘 네트워크와 미디어 개발 조직을 통해 모집되었으며, 여기에는 국제언론인센터(ICF) 및 유네스코(UNESCO) 프로그램 참가자 집단이 포함되어 있다.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여성 언론인 중 20%는 자신을 표적으로 삼은 온라인 폭력과 관련이 있다고 짐작되는 오프라인 학대와 공격을 경험했다. 이들에 대한 온라인 폭력이 디지털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다. 한 예로 2017년에 언론인보호위원회(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는 지금까지 살해된 언론인 중 약 40%가 살해되기 전에 온라인을 포함한 위협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에 강력한 보호

* 해외 여성통신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제동향 중 '해외통신원' 주요 기사를 정리한 것임.

1) 작성 : 채혜원 독일통신원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해에는 인도와 몰타에서 저명한 두 여성 언론인이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젠더 온라인 공격의 표적이 된 후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 더욱이 여성 저널리스트에 대한 온라인 공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처음으로 언론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2014년, 유네스코가 지원한 한 연구에서 약 1,000명의 여성 기자를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3%가 업무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위협, 협박 또는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여성미디어재단(IWMF)과 트롤버스터(Trollbusters)가 2018년에 이어 진행한 후속 연구에서는 여성 응답자의 63%가 온라인에서 적어도 한 번은 괴롭힘을 당하거나 학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여성 저널리스트가 경험하는 온라인 폭력 비율이 70%를 넘은 것으로 보아 연구진은 여성 언론인에 대한 온라인 젠더 폭력이 지난 10년 동안 악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 이번 연구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줄리 포세티 박사는 독일 언론 도이치벨레(DW) 기고문을 통해 “온라인 폭력은 저널리즘 안전의 새로운 최전선이며 특히 여성에게 위험하다. 여성 저널리스트는 일상생활에서 높은 수준의 괴롭힘과 폭행 및 학대를 경험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혐오 표현과 거짓정보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공격은 여성 저널리스트가 일하는 매체나 독자, 사적으로는 가족으로까지 확대되며 저널리스트와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를 끼치는 위협을 받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연구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과 소셜미디어 위험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신체 폭력이 증가했듯이, 여성 저널리스트에 대한 온라인 폭력 역시 증가했다. 국제언론인센터(ICFJ)와 컬럼비아대학이 올해 초 실시한 다른 글로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응답자의 16%가 온라인 학대와 괴롭힘이 평상시보다 훨씬 더 심하다고 답했다. 주된 요인으로는 대개 포퓰리스트나 보수적인 정치인에 의해 촉진된 언론에 대한 적대감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직접 취재가 어려워지면서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한 취재에 의존하게 된 배경이 있다.
- 문제는 이처럼 온라인 폭력이 심각해졌지만 이에 대해 대항하며 발언하는 여성 기자들은 더 큰 표적이 되거나 현장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이후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일부 여성 저널리스트는 온라인 폭력 경험에 대한 반응으로 일선 보도 현장에서 철수하고 직장을 그만두거나 공개되어있는 온라인 채널에서 탈퇴하고 있었다. 저널리즘을 공부하는 여학생들은 부정적인 온라인 경험이나 작업 과정에서 온라인 폭력에 노출될 위험으로 인해 경력을 쌓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에 줄리 포세티 박사를 비롯해 재키 해리슨 교수, 실비오 와이즈보드 교수 등 연구진은 뉴스 조직이 성인지적인 정책과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성 저널리스트에 대한 실제 폭력은 온라인 위협이 먼저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니, 온라인 폭력을 경험한 여성 저널리스트에 대해 신체적 안전 지원과 상담 서비스를 포함한 심리 지원, 사이버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조치를 포함한 디지털 보안 강화 등이 제공되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구진은 필요한 경우, 법적 지원을 통해 단호하게 이 문제에 대응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연구진은 ▲언론 자유 보호와 언론 안전 확보를 위해 국제 인권 프레임 안에서 책임을 다하는 강력한 소셜미디어 회사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거짓 정보와 증오 발언에 단호하게 대처 ▲디지털 플랫폼이 스스로 뉴스 발행인으로서의 기능을 받아들이고 이용자로 하여금 사실 확인 및 증오 표현에 관한 규제 기준 마련 ▲디지털 회사, 뉴스룸, 시민사회 조직, 연구기관, 정부, 사법 영역에 걸친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참고문헌 •

DW(2020.11.25.), "New Research: Online attacks on women journalists lead to 'real world' violence", <https://www.dw.com/en/new-research-online-attacks-on-women-journalists-lead-to-real-world-violence/a-55712872> (접속일: 2020.12.14.)

유럽연합, 외교영역 성평등 실현을 위한 '2021~2025 대외정책의 양성평등과 여성권한 강화 행동계획' 발표²⁾

- 2020년 11월 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연합 외교 문제·안보정책 고위대표(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는 유럽연합의 대외정책에서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한강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1~2025 대외정책에서의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한강화를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 on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in External Action 2021-2025)을 발표했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공식 성명문을 통해 지금과 같은 수준이라면 2030년까지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 목표 달성할 수 있는 나라가 전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게다가 올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대확산으로 여성의 실업률은 남성보다 1.8배 더 높고 여성 빈곤율은 약 9.1%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 이러한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발표된 본 행동계획은 양성평등에서의 문제 개선에 보다 박차를 가할 것을 명시하면서, 총 5가지의 양·다자 외교정책 및 사업에 이행할 주요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³⁾
 - 1) 대외정책 이행 및 사업에서의 양성평등 관련 목표 수립비율 85% 달성: 각 분야에서의 대해 성 주류화 원칙 적용. 인프라, 에너지, 농업 등 대외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양성평등을 추진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실시된 유럽연합의 새로운 대외정책 사업들 중 64.25% 가량이 양성평등을 사업 목표 중 하나로 설정했으며, 이는 경제적으로 약 87억 유로(한화 약 11조 7400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5년까지 이 비율을 85%로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제시함

2) 작성: 박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3) 본 행동계획은 '여성과 여아(women and girls)'로 명시하고 있으며, 본 원고에서는 가독성을 위해 모든 연령층을 포괄할 수 있는 '여성'으로 표기함.

- 2) 다자기구, 각 국가, 지역 차원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주체 및 회원국들과 전략을 공유하고 협력: 회원국, 시민사회단체, 여성인권 활동가 등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양성평등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
 - 3) 중점 분야에 집중하여 양성평등 추진 가속화: 중점분야로 △ 젠더기반 폭력 철폐, △ 성·재생산 보건에 대한 접근성 및 권리 향상, △ 여성의 사회·경제적 권한 강화, △ 정치 및 공공분야에서 여성 참여, △ 여성·평화·안보(Women, Peace and Security) 규범 이행, △ 녹색 에너지 전환 및 디지털 정보 전환 분야에 여성 포함 제시
 - 4) 지도자들의 솔선수범: 정치 및 경영 분야에서의 지도자들에게 리더십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갖고 본 행동계획 목표 이행에 솔선수범 할 것을 요청
 - 5) 성과 측정: 유럽연합은 공공 책무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질적, 양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수립할 것.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대외관계청(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EEAS)과 협력하여 매년 행동계획 이행정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
- 유럽연합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여성과 여아의 인권, 양성평등 규범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다양한 대외정책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발표한 5개년 행동계획 역시 이러한 유럽연합 차원의 양성평등에 기여하기 위한 대외정책의 일환으로 수립되었는데, 실질적인 추진과 성과가 향후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각 회원국들이 실제 대외 정책에 행동계획 내용을 반영하고 이행할지 그 여부를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European Commission(2020.11.25.), "Gender Action Plan – putting women and girls' rights at the heart of the global recovery for a gender-equal world",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2184 (접속일: 2020.12.22.)
- European Commission(2020.11.25.), "Towards a gender-equal world", <https://ec.europa.eu/inter-national-partnerships/system/files/factsheet-draft-gender-action-plan-v08.pdf> (접속일: 2020.12.22.)

유럽, 디지털 연구 및 기기 설계 단계에 젠더·다양성 관점 적용 요구 확산⁴⁾

- 지능형 개인 비서 기능을 하는 애플의 음성인식서비스 시리(siri)와 아마존의 알렉사(Alexa) 등 디지털 비서 기능 장치와 가정용 로봇이 전통적인 성별 고정관념을 고착하고 있다는 전문가들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장치들은 식료품을 주문하고, 바닥을 청소하고, 집안의 조명을 끌 수 있다. 일본의 디지털 음성 비서 히카리 아즈마(Hikari Azuma)는 낮 동안 마스터에게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보내고, 미국 섹스 로봇으로 만들어진 록시(Roxy)도 여러 종류의 집안일을 한다. 여성화된 AI 장치와 로봇 및 스마트 장치는 친절하고 효율적이며 사용자가 원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아내에

4) 작성: 채혜원 독일통신원

게 맡겨져 온 가정적 책임을 지는 ‘아내 업무’를 수행하는 디지털 장치의 출현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들은 남성 지배적인 산업에서 설계된 가상 도우미로, 과거 주부이자 백인, 중산층, 이성애 중심 문화 등을 모두 담고 있다.

- 독일 언론은 최근 발간된 <The Smart Wife>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비서 기능 장치의 성별 고정관념 문제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호주 모나시 대학의 Yolande Strengers 교수와 로열 델버른 공과대학의 Jenny Kennedy 박사는 함께 펴낸 책 <The Smart Wife>에서 시리나 알렉스 등 스마트 홈 장치에 페미니스트 리부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마트 와이프’는 전통적으로 아내에게 맡겨져 왔던 가정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고안된 인공 지능 또는 로봇 사물을 뜻한다. 2021년부터 유럽 과학기술 분야 연구 혁신 지원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에는 지원자와 평가자가 젠더 관점을 다루고 평가해야 하는 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 ‘The Smart Wife’ 연구진은 이러한 기기의 디자인이 구식이며 과거 성별 고정관념을 다시 새겨 넣어 성평등을 후퇴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기기들은 여성 형태를 띠고 있으며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전통적인 여성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 돼 있다”며 “그런 점에서 많은 이들이 기기를 이용하면서 무의식적으로 편안하게 느끼며 이는 상업적 전략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들은 여전히 여성이 가사 일을 수행하지만, 남성이 주로 가정용 디지털 기기를 관리하고 있는 점에도 주목했다.
- 연구진이 말하는 디지털 장치에 대한 페미니스트 리부트는 장치를 이성애 중심의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도록 재설계하는 일이다. 디자이너와 프로그래머의 젠더 감수성과 다양성을 향상하고, 장치에 숨겨진 고정관념을 드러내기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하는 방법이다. 이들은 기계가 어떻게 설계되고 어떤 방법으로 성격이나 개성을 만들어내는지를 들여다보는 것뿐만 아니라, 미디어에서 여성 형태를 띠고 있는 기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우리는 종종 이런 디지털 기기를 만드는 회사보다 여성 형태를 띠고 있는 장치를 비난하는 방식과 그것이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본다”고 전했다.
- ‘The Smart Wife’ 연구진의 페미니스트 리부트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유럽연합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의 새로운 정책이 있다. 유럽연합위원회의 연구혁신 지원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 펀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원자와 평가자에게 새로운 요건으로 ‘젠더 차원에서의 고려’를 도입한 것이다. Horizon Europe는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 창출, 국제 교류 확대,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위원회의 마리아 가브리엘은 위원회 발표 자료에서 “연구와 혁신 분야에서 성별과 젠더 기반 분석이 이뤄지고 인종과 연령, 장애 등과 같은 여러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은 우수한 연구를 생산하는데 주요한 이슈”라고 말했다. 성별 및 젠더 차원에서 분석이 요구되는 연구 영역은 건강, 도시 계획, 기후 변화, AI와 얼굴 인식, 가상 비서 및 소셜 로봇 등이다. 그렇다면 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서 지원자와 평가자는 어떻게 젠더 관점을 다루고 평가해야 하는가. 이는 다음과 같다.

- 연구 및 혁신 콘텐츠에서의 젠더 관점
 - 연구 결과가 여성과 남성 그룹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 주제는 젠더와 관련된 연구 작업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펀딩 지원자는 성별 또는 젠더와 관련한 특정 작업을 제안서 일부에 포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평가자는 제안서에서 성별 및 젠더 분석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영향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연구 및 혁신 활동’과 ‘혁신 활동’ 분야 평가 하위 기준에 ‘젠더 차원’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평가자는 연구 및 혁신 콘텐츠의 우수성 평가를 할 때 젠더 관점에서 이를 고려해 평가한다.
- 연구팀의 성별 균형
 - Horizon Europe은 지원자에게 작업 과정에 있는 연구 및 혁신팀 내에서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를 장려하고 특히 남녀의 균형 잡힌 참여가 보장되도록 관리 구조 형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른 요인과 함께 ‘성별 균형’은 각 기준에서 동일한 점수를 가진 제안 중 우선순위를 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동일한 점수를 가진 제안서가 작업 프로그램 범위 또는 할당된 예산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컨소시엄팀의 ‘성별 균형’을 따져 순위를 매긴다. 여기서 지원자는 제안된 연구와 혁신 활동을 수행할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의 성별을 지정해야 한다.
- 무의식적인 젠더 편향 방지
 - 성별 고정관념은 여성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과소평가와 같은 무의식적인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평가 과정에서 무의식적인 성별 편견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모든 제안서는 지원자의 출신, 정체성 및 성별 등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평가된다.
- 유럽연합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The Smart Wife’ 연구진은 중요한 새 조치이며, 디지털 산업 분야 외에도 보건, 기후, 에너지, 혁신 등 모든 분야에 젠더뿐만 아니라 다양성 관점을 고려하는 제도가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제품을 설계할 때도 이미 기기를 구축한 다음 젠더와 다양성 관련 팀이 참여하여 수정 및 변경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양성과 젠더 관점으로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재 사용 중인 장치에 한해서는 사용자에게 설계 디자인 과정을 알려주고 그들이 어떤 종류의 표현(예를 들어 목소리)을 사용할 것인지 검증하는 과정을 도입하는 것이 재부팅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참고문헌 •

- The European Commission(2019.9.6.), “How should gender be addressed and evaluated in Horizon 2020 proposals?”, <https://ec.europa.eu/info/funding-tenders/opportunities/portal/screen/support/faq/977> (접속일: 2021.1.19.)
- ZDNET(2020.11.3.), “The Smart Wife, book review: A feminist take on smart home tech”, <https://www.zdnet.com/article/the-smart-wife-book-review-a-feminist-take-on-smart-home-tech/> (접속일: 2021.1.19.)
- DW(2020.12.17.), “The Smart Wife: Is your home voice assistant sexist?”, <https://www.dw.com/en/the-smart-wife-is-your-home-voice-assistant-sexist/a-55970209> (접속일: 2021.1.20.)

프랑스, 유급 부성휴가 14일에서 28일로 확대⁵⁾

- 2020년 9월, 프랑스의 엠마누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자녀 출산 시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부성휴가를 28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14일에 비해 무려 2배 늘어난 기간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 2002년 도입되어 현재 실시되고 있는 프랑스의 부성휴가는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 출산 휴가 3일, 태어난 자녀를 돌보기 위한 부성휴가 11일(달력상 연속 11일, 주말 및 공휴일 포함)로 총 14일을 사용할 수 있다. 3일의 출산휴가와 11일의 부성휴가는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11일의 부성휴가는 자녀가 태어난 뒤 4개월 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태어난 자녀가 신생아 병동에 입원해야 하면 이와 별도로 최대 30일(달력상 연속 30일, 주말 포함)을 신청할 수 있다.
- 현재 부성휴가는 피고용자라면 제도상의 일정 요건 충족 시 계약직이나 정규직과 같이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일정 요건이란 휴가 시작 최소 한 달 전에는 고용주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점, 휴가 사용 시작일 기준 최소 10개월간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 휴가 사용 시작일 이전 3개월간 총 최소 150시간 근무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일단 피고용자가 부성휴가를 신청하면, 고용주는 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계약 근로자의 경우, 남성이 부성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고용계약 기간은 연장된다. 고용주는 휴가와 관계없이 업무 이행에 있어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부성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계약을 종료할 수 없다. 여성의 출산휴가와 남성의 부성휴가 수당은 휴가 사용 시점에서 과거 3개월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프랑스 국가 건강보험기금(Caisse Primaire d'Assurances Maladie, CPAM)이 개인별 상황에 따라 일일 부성휴가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휴가 시작일에서 지난 3개월 세전 소득이 기준이 되며 지급 수당액이 일 최소 9.63유로(한화 약 12,800원)에서 최대 89.03유로(한화 약 11만 9천원)로 한정되어 있다.
- 이처럼 자녀 출산과 관련하여 남성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수립되고, 이행되고 있었으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로서 쓸 수 있는 휴가가 총 14일뿐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 프랑스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자녀와 부모가 중요한 유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 함께하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기존 14일 부성휴가는 매우 짧았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9년에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조직하여 출산 후 자녀의 첫 1,000일간에 대해 연구를 했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위원회는 9주간의 부성휴가를 마크롱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이후 정책 변화로 인한 현실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프랑스 정부는 14일에서 28일로 유급 부성휴가 제도를 개정하기로 했다.
- 프랑스 정부는 확대된 부성휴가 제도 이행으로 자녀들이 태어나고 중요한 첫 1,000일 동안 부모가 최대한 함께하면서 보다 나은 발달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고, 남녀가 더욱

5) 작성 : 박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동등하게 자녀 육아 부담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현재 프랑스에서는 여성은 출산일 전 6주, 출산 후 10주의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출산 전후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2~4주 추가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최소 8주는 무조건 쉬어야 하는 것으로 의무화되어있다. 여성의 출산휴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 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선 기존의 프랑스 노동법(Labor Code) 수정이 필요했으며, 수정안은 프랑스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프랑스 의회는 2021년 사회보장 기금 예산안에 28일로 확대된 유급 부성휴가 정책도 포함했다.
- 새로 실시되는 유급 부성휴가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급 부성휴가 7일은 의무로 무조건 이행되어야 한다. 7월부터 시행되는 부성휴가 제도에서 주어지는 28일 휴가 일수를 여러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의 7일 유급 부성휴가를 거부하는 기업은 최대 7,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쌍둥이를 출산하면 사회보장제도에서 최대 32일 부성휴가를 허용한다. 입양을 통해 자녀가 생길 때에도 동일한 유급 부성휴가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이제까지 시행된 유급 부성휴가 일수를 고려하면 이번 정책으로 유급 부성휴가가 2배나 확대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올해 7월 이후 새로운 부성휴가가 도입된 뒤, 아버지가 된 남성들이 실제로 최대 28일의 휴가를 사용하는지 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Government(2021.1.13.), "Allonger le congé paternité : une nouvelle avancée pour mieux accompagner les premiers jours de l'enfant(Extending paternity leave: a new step forward to better support the child's first days)", <https://www.gouvernement.fr/les-actions-du-gouvernement/sante-famille-handicap/allonger-le-conge-paternite-une-nouvelle-avancee> (접속일: 2021.1.22.)
- Library of Congress(2020.12.9.), the United States, "France: Parliament Approves Extension of Paternity Leave". [https://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france-parliament-approves-extension-of-paternity-leave/#:~:text=\(Dec.,days%2C%20including%20seven%20mandatory%20days.&text=Furthermore%2C%20adoptive%20fathers%20will%20be%20eligible%20for%20paternity%20leave%20as%20well](https://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france-parliament-approves-extension-of-paternity-leave/#:~:text=(Dec.,days%2C%20including%20seven%20mandatory%20days.&text=Furthermore%2C%20adoptive%20fathers%20will%20be%20eligible%20for%20paternity%20leave%20as%20well) (접속일: 2021.1.22.)
- Service-Public(2020.6.22.), "Congé de paternité et d'accueil de l'enfant d'un salarié du secteur privé (Paternity and foster leave for the child of a private sector employee)",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156> (접속일: 2021.1.19.)
- The Guardian(2020.9.23.), "France doubles paid paternity leave to 28 days",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sep/23/france-doubles-paid-paternity-leave-to-28-days> (접속일: 2021.1.22.)

영국, 다자녀 가구 복지 혜택 깎자 저소득층 낙태 증가⁶⁾

- 영국에서 다자녀 가정에 지원하는 정부 복지 혜택 기준을 자녀 2명으로 제한한 정책이 자녀를 두 명 이상 키우는 저소득층 여성들이 임신 중절을 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이러한 낙태 추세는 코로나19로 경제적인 타격을

6) 작성: 황수영 브리스톨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증가하고 있어 여성 단체들은 저소득층 여성을 낙태로 내모는 해당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영국에서 ‘two-child limit’으로 알려진 두 자녀 제한 정책은 다자녀 가구에 지원하는 세제 혜택, 주거지원(Housing Benefit),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 기준을 자녀 2명으로 제한한 것을 말한다. 유니버설 크레딧은 저소득층의 소득 정도에 따라 현금 등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영국의 복지 제도다. 한국으로 치면 최소생계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슷하다.
- 하지만 2017년 4월 이 정책이 시행되면서 2017년 4월 6일 이후 셋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은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추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정부 계산에 따르면,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 한 명당 연간 평균 2,780파운드(한국 돈 410만 원)에 해당하는 복지 혜택을 잃는다. 이 정책의 시행 배경에는 정부 지원금 없이 부모의 근로 소득으로 셋째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때만 셋째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라는 논리가 깔려 있다. 즉, 자녀를 세 명 이상 더 낳는다고 해도 정부가 추가로 복지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 여성 단체들은 두 자녀 제한정책이 자녀를 두 명 이상 키우는 엄마들이 낙태를 택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영국의 대표 임신 중절 지원 단체인 영국 임신 지원 서비스(British Pregnancy Advisory Service, BPAS)가 2020년 12월 3일 발표한 보고서 ‘벼랑으로 몰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임신 결정과 두 자녀 제한정책(Forced into a corner: The two-child limit and pregnancy decision making during the pandemic)’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영국에 확산한 뒤 임신 중절을 한 여성 대다수가 ‘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택했으며, 이 중 57%가 “두 자녀 제한정책이 낙태를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 BPAS는 2020년 3월 이후 임신 중절을 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엄마 240명을 대상으로 10월 12일부터 11월 9일까지 온라인 설문 조사를 했다.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9%가 유니버설 크레딧을 받는 저소득층으로 두 자녀 제한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여성은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을 대는 것이 정부의 임무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 (두 자녀 제한정책) 때문에 이런 결정 (낙태)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 두 자녀 제한 정책은 2017년 시행 전부터 영국에서 논쟁이 됐다. 정부 지원금에 의존했던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 탓이다. 지난해에는 두 자녀 제한 정책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60만 명에 달한다는 영국 정부의 공식 통계가 등장해 저소득 가구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
- 이 연구를 주도한 캐서린 오브린 BPAS 캠페인 부대표는 “코로나19 상황과 두 자녀 제한 정책의 부작용이 겹치면서 다자녀 저소득층 가정의 여성이 낙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 정책을 폐지하지 않으면 원하는 임신을 했을 경우에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낙태를 택하는 여성이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참고문헌 •

- PAS(2020.12.03.), "Forced into a corner: The two-child limit and pregnancy decision making during the pandemic", <https://www.bpas.org/media/3409/forced-into-a-corner-the-two-child-limit-and-pregnancy-decision-making-during-the-pandemic.pdf> (접속일: 2020.12.15.)
- The Guardian(2020.12.03.), "Two-child benefit cap influencing women's decisions on abortion, says BPAS",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0/dec/03/two-child-limit-on-benefits-a-key-factor-in-many-abortion-decisions-says-charity> (접속일: 2020.12.15.)
- GOV.UK(2019.04.02.), "Child Tax Credit and Universal Credit claimants Statistics related to the policy to provide support for a maximum of two children",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21773/Two_children_and_excptions_in_tax_credits_and_Universal_Credit_April_2019.pdf (접속일: 2020.12.15.)

영국 가정폭력 피해자, 약국에서 '암호' 사용해 도움 요청한다

- 영국 정부는 2021년 1월 14일부터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약국에서 암호를 사용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한다. 영국에서 코로나19로 전국 봉쇄령이 내려진 뒤 가정폭력 피해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가정폭력 의심 사망사고까지 발생하자 영국 정부가 피해자 지원단체의 목소리를 수용해 해당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 영국 전역 2,855개 약국에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사용할 암호는 'ANI'다. 만약 누군가 약국 직원에게 ANI라는 암호를 사용하면 약국 직원이 도움을 청한 사람을 약국 상담실과 같은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이야기를 나눈 뒤 경찰이나 피해자 지원단체 등으로 연결한다. 전국 모든 약국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은 'The Ask for ANI'라는 정책에 참여한 약국에서만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월 14일 기준으로 영국의 약국 체인점인 Boots 2,300곳, 개인 약국 255곳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현재 영국 정부가 온라인으로 정책에 참여할 약국을 추가 모집하고 있어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동네 약국을 가정폭력 피해 신고 거점이 된 것은 약국의 접근성 때문이다. 약국 체인점인 Boots는 약뿐 아니라 간단한 식료품, 생필품, 화장품 등을 모두 판매하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편의점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편의점처럼 동네 곳곳에 있어 피해자들이 접근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영국 정부는 약국 안에는 정책 홍보 자료를 배치하고, 밖에는 'Ask for ANI 참여 약국'이라고 별도로 표시해 피해자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 약국이나 슈퍼마켓 같은 시설을 가정폭력 피해자 신고 거점으로 만들자는 아이디어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단체 쪽에서 먼저 나왔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위기 아동 등을 돕는 영국의 비영리단체인 Hestia는 지난해 'Safe Spaces'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 역시 영국의 유명 약국 체인점인 Boots, Superdrug, Morrisons과 협업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약국 상담실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국 정부의 Ask for ANI와 비슷하다.
- 민간에서 시행되던 프로그램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지난해 4월부터다. 지난해 4월, 영국에서 영국 봉쇄령이 내려진 뒤 3주 만에 여성 16명이 가정폭력이

숨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코로나19와 가정폭력의 연관성이 알려졌고, 같은 달 열린 영국 내무성 특별위원회 화상회의에서 약국이나 슈퍼마켓에서 암호를 사용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자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나왔다. 데임 베라 바일드 영국 웨일스 가정폭력 피해자 경찰 국장은 회의에서 “슈퍼마켓 직원과 가정폭력 피해자가 그들끼리만 아는 비밀 코드를 만들어 도움을 청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하였고, 지난해 5월 21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주재한 화상 회의인 ‘Hidden Harms Summit’에서 정책의 윤곽이 잡혔다. 이 회의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피해자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존슨 총리를 비롯해 국가범죄국(National Crime Agency), 국가경찰청장협의회(National Police Chiefs’ Council), 아동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등이 회의에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영국 정부는 전국약국연합(the National Pharmacy Association), 영국소매협회(British Retail Consortium)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가 협업해 ASK for ANI 정책을 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에 200만 파운드(한화 약 31억 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 이와 함께 영국 정부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가해자의 보석 기준을 강화해 피해자 보호에 더 힘쓰기로 했다. 영국 내무성은 1월 14일, ‘기소 전 보석에 대한 정부 입장(Police Powers: Pre-charge Bail Government Response)’라는 보고서를 통해 The Ask for ANI 정책과 함께 기소 전 보석(pre-charge bail)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 영국에서 경찰 보석(police bail)이라고 더 잘 알려진 기소 전 보석이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경찰이 체포한 뒤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나 수사 자료가 없어 더 구치소에 수감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이럴 경우 경찰은 체포한 피의자를 풀어줘야 해 피의자가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위협하거나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는 법의 허점이 존재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가정폭력, 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에 대해 피해자나 증인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기소 전 보석 기준과 절차를 더 강화한다.
-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은 “Ask for ANI 정책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받고, 기소 전 보석 제도를 개선해 가정폭력 피의자들이 피해자와 다른 시민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두 정책의 의미를 설명했다.

· 참고문헌 ·

- GOV.UK(2021.1.14.), “Pharmacies launch codeword scheme to offer lifeline to domestic abuse victims”, <https://www.gov.uk/government/news/pharmacies-launch-codeword-scheme-to-offer-lifeline-to-domestic-abuse-victims> (접속일: 2021.1.20.)
- GOV.UK(2021.5.21.), “New measures announced ahead of hidden harms summit”,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measures-announced-ahead-of-hidden-harms-summit> (접속일: 2021.1.20.)
- UK Parliament(2020.4.14.), “Impact of Covid-19 (Coronavirus) on domestic and child abuse examined”, <https://committees.parliament.uk/work/184/home-office-preparedness-for-covid19-coronavirus/news/114837/impact-of-covid19-coronavirus-on-domestic-and-child-abuse-examined/> (접속일: 2021.1.20.)
- Home Office(2021.1.14.), “Police Powers: Pre-charge Bail Government Response”,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51847/2020-01-14_Response_to_PCB_consultation.pdf(접속일: 2021.1.20.)

핀란드 정부, 역대 최연소 여성 총리와 여성 정당 대표들 활약 두드러져⁷⁾

- 2020년 11월, 영국 공영방송 BBC는 전 세계 다양한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올해의 여성 100인(BBC 100 Women 2020)’을 발표했다. 그중 한 명으로 핀란드의 산나 마린(Sanna Marin) 총리가 포함되어 있다. 산나 마린 총리는 2015년 의회에 입성한 신예 정치인으로 2019년 12월, 34살의 나이로 총리로 선출되었다. 또한 현재 핀란드 정부는 5개 정당이 연립정부 형태로 출범했는데, 현재 정당 대표들이 모두 여성이다. 본 원고는 핀란드 정부의 전반적인 성평등 추진을 위한 제도적 틀과 중점분야 등에 대해 개괄하고자 한다.
- 핀란드는 이미 1980년부터 양성평등을 위한 정부 행동계획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행동계획 2020-2023(Government Action Plans for Gender Equality)을 추진하고 있다. 본 행동계획은 1986년 제정된 남녀평등법(Act o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회보건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에서 담당하고 있다.
- 사회보건부 내에는 양성평등국(Gender Equality Unit)이 조직되어있다. 그리고 의회 내 성평등위원회(Council for Gender Equality, TANE)에서 입법안 제출, 성평등 관련 연구결과 정책 활용방안 모색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와 사회의 각종 기관들의 남녀평등법 이행을 감독하고 차별문제를 처리 및 중재하는 역할은 독립된 평등 옴부즈만(Ombudsman for Equality) 및 국가 차별 및 평등 조사위원회(National Discrimination and Equality Tribunal)에서 맡고 있다.
- 현재 추진 중인 2020-2023 행동계획은 경제분야 내 근로 및 의사결정직에서의 성평등, 가사 및 양육 동등한 분담, 남녀 평등한 교육, 여성대상 폭력 및 가정폭력 근절, 성소수자 지위 향상, 성 주류화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핀란드 남녀평등법에서는 모든 정부기관이 사회 전반에서의 성평등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 올해 사회보건부와 핀란드 통계청(Statistics Finland)은 2020년 직장에서의 성평등 및 동등 임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 결과 평균 동일직종의 남녀 근로자 임금격차가 약 16% 정도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현 정부는 남녀 동일임금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성평등을 직접적으로 목표로 하는 정책 개발 및 추진 이외에도, 산나 마린 총리가 이끄는 현 핀란드 현 정부는 사회, 경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정책안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젠더도 소득격차, 이민자 가정 등 다각도에서의 불평등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하나의 범분야 이슈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7) 작성 : 박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일각에서는 여성 총리와 여성 정당대표들이 이끄는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던지거나, ‘립스틱 내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여성 정치 지도자들이 배출된 사실 만으로 의사결정직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토마스 블롬퀴스트(Thomas Blomqvist) 노르딕 협력 및 평등 장관(Minister for Nordic Cooperation and Equality)은 한 매체를 통해 “여성 총리와 여성 정당 대표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여성의 의사결정직 진출에 있어 상당한 의미를 갖지만, 오랜 시간 남성이 사회, 경제 등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지위를 누려왔다. 평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앞으로 남녀가 동등한 기회를 갖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 핀란드에서 여성 총리, 그리고 여성 정당 대표들이 이끄는 핀란드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 된 만큼, 앞으로의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다. 현 정부가 핀란드 사회에 아직 남아있는 성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개선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 참고문헌 •

- BBC(2020.11.24.), “Sanna Marin: The feminist PM leading a coalition of women”, <https://www.bbc.com/news/stories-55020994> (접속일: 2020.12.08.)
- Finnish Government(2020), “Inclusive and competent Finland – a socially, economically and ecologically sustainable society”, <https://valtioneuvosto.fi/en/marin/government-programme> (접속일: 2020.12.08.)
- Finnish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2020.11.03.), “Minister Blomqvist: Gender equality planning at workplaces must be enhanced”, <https://stm.fi/en/-/minister-blomqvist-gender-equality-planning-at-workplaces-must-be-enhanced> (접속일: 2020.12.08.)
- Finnish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2020), “Gender equality policy”, <https://thl.fi/en/web/gender-equality/promoting-gender-equality/gender-equality-policy> (접속일: 2020.12.08.)
- Nordic Labour Journal(2020.03.06.), “Lipsticks or bulls? Finland has changed after women came to power”, <http://www.nordiclaborjournal.org/i-fokus/in-focus-2020/theme-gender-equality-in-the-nordics/article.2020-03-06.3373215147> (접속일: 2020.12.08.)

캐나다, 코로나19 여파로 여성 경제활동 위축⁸⁾

- 캐나다에서는 코로나 2차 확산과 장기화의 여파가 여성, 특히 젊은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특히 가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2월 4일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통계에 따르면 15세에서 24세 사이 연령대 실업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이 연령대의 여성이 장기적으로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0년 11월, 15세에서 24세 사이 연령대에서 10월 대비 0.9% 고용률의 증가가 있었다. 같은 연령대 실업률 또한 1.4%p 하락하여 17.4%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표면적으로 이 연령대 청년들의 경제활동이 소폭이나마 회복되고 있다고 보일 수 있으나, 통계청은 이러한 회복세를 남성들의 경제활동이 부분적으로 회복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지난달 이 연령대의 남성 고용이 대폭 증가한 반면 여성들의 고용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2020년 3월말, 캐나다 사회가 대대적인 섯다운에 들어간 이후 사회 초년

8) 작성: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생인 이 연령대의 타격이 컸으나, 하반기 들어 건설 현장 등 다양한 현장 노동자들이 서서히 활기를 되찾으면서 남성들의 실업률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실제로 2020년 11월 건설직의 고용율은 7월 이후 최초로 증가세를 보여 26,000건의 고용을 창출했다. 운수업과 창고업도 11월 2.1%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나 이 연령대 여성의 취업률은 올해 2월에 비교해 11% 낮은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였고 남성들의 경제활동이 부분적으로 회복된 11월에 들어서도 큰 변동이 없었다.

- 이렇게 확인한 경제활동 회복에서의 성별 격차는 캐나다의 포스트 팬데믹 경제 회복 계획에 젠더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토론토 스타(Toronto Star)지는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어 여성에게 기대되는 돌봄의 의무가 팬데믹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적 선택지를 더욱 축소시키고 있고 이는 특히 젊은 여성, 비 백인, 그리고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가장 가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해석했다. 관광, 레저, 서비스업은 청년층, 특히 젊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주된 경로인데 이들 산업이 장기적으로 사실상 마비상태에 있게 됨에 따라 사회 초년생 여성들의 실업 또한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9월까지의 진정세였던 코로나 사태가 10월 부터 2차 확산 사태에 들어섬에 따라 온타리오 곳곳에서는 다시 식당과 카페 등에서 매장 내 취식을 금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소매업, 문화, 레크레이션, 숙박, 요식업 산업에는 2019년 기준 청년 고용의 25.4%가 집중되어 있는데, 통계청은 이번 2차 위기의 파장이 3월 1차 위기에 맞먹는 강도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한편 캐나다 주정부들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회복에 힘을 쏟고 있다. 그 결과 11월 온타리오주에서 고용률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지만, 일각에서는 현 온타리오 정부의 경제 회복 계획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실업률 감소에만 치중한 나머지 일자리 창출에만 매몰되어 있고 어떻게 교육과 돌봄에 투자하여 여성들을 일터로 돌아오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그간 코로나 경제 위기의 젠더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쉬세션(shecess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실제로 핵심 경제활동 연령대인 25세에서 54세 사이 여성의 고용율은 지난 6개월 동안 변함이 없었는데, 예컨대 11월만 해도 정규직 고용에 소폭 상승(+1.0%)이 있더라도 여성들에게 집중된 파트타임직에서의 상실분(-5.0%)이 훨씬 컸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핵심 경제활동 연령대 여성들의 경우 9월에 경제활동 참여율이 팬데믹 이전의 수준 근처로 회복한 이후 11월까지(83.8%) 꾸준히 이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반면, 15세에서 24세의 여성들의 경우 3월 이후 장기적인 고실업률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사회 초년생 여성들이 장기적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립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캐나다에서 장기화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정폭력의 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큰 화두인 만큼 성별, 그리고 연령별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 참고문헌 •

- Toronto Star(2020.12.07.), "Jobs remain elusive for young women amid COVID-19 second wave", <https://www.thestar.com/news/canada/2020/12/07/jobs-remain-elusive-for-young-women-amid-covid-19-second-wave.html> (접속일: 2020.12.10)
- Statistic Canada(2020.12.04.), "Labour force survey November", <https://www150.statcan.gc.ca/n1/daily-quotidien/201204/dq201204a-eng.htm> (접속일: 2020.12.10)

캐나다 원주민 사회, 성 지향과 성별에 따른 폭력과 차별 근절 위한 조직적 노력 강화

- 캐나다는 영국과 프랑스계 이민자 및 북미대륙 원주민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국가로서 지난 시기 원주민에 대한 억압적이었던 역사에 대한 자성의 노력도 활발한 편이다. 그러나 원주민 사회에 대한 오랜 문화적·경제적 억압의 결과는 캐나다의 원주민 사회의 경제적 궁핍, 사회적 주변화에 더불어 심각한 젠더 폭력의 양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 캐나다 통계청이 2018년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올 12월에 펴낸 보고서에 의하면 캐나다 북부 세 개의 준주(territories)에 사는 주민들의 반 이상이 15세 이후 성적 혹은 육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준주들은 북극과 가까이 있고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원주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데, 61%의 유콘(Yukon) 주민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 십대 중반을 지나면서 최소한 한 번 이상 육체적 혹은 성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누이트족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누나뿃(Nunavut) 준주의 경우에도 52%의 여성, 55%의 남성 응답자들이 육체적 성적 폭력을 경험 해 본 적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들 북부 준주 전반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성폭행의 피해자가 될 확률은 세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언론(HuffPost)과의 인터뷰에서 유콘 여성의위원회(Yukon Status of Women Council)의 전문가는 이 조사 결과를 원주민 사회에 만연한 강간 문화(rape culture)를 보여주는 방증이라 해석하면서, 심각한 인종차별과 문화 말살 정책을 몸소 체험한 원주민들 사회에 뿌리 깊이 자리잡은 정부와 경찰에 대한 완전한 불신 때문에 이러한 강간 문화가 더욱 성행하고 성폭력을 당했을 시에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에 접근성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 이렇게 원주민 사회에 만연한 젠더폭력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원주민 사회 내부로부터 조직적인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 2020년 12월 9일 90만명 이상의 캐나다 원주민들과 그들의 645개 부족 공동체들을 대표하는 기관인 퍼스트 네이션 의회(ANFN, The Assembly of First Nation)의 여성 의원들은 퍼스트 네이션 의회 내에서의 여성과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 열린 찬반 토론 끝에 78%의 찬성으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퍼스트 네이션 의회에는 여성의위원회(The Women's Council)가 그동안 의원들로 하여금 원주민 사회의 여성들과 여성리더십 지원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해왔으나, 젠더 평등 정책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다. 또한 2019년에는 퍼스트 네이션 의회의 남성 의원이 자신을 성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는 원주민 여성단체 여성 인사를 성차별적인 언사와 괴롭힘,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한 인사 개입 및 살해 협박 등을 동원하여 이 여성의 신고를 막으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 가해자가 의회에서 제명되었던 사건도 있었다.

- 퍼스트 네이션 의회의 세 명의 여성 의원 중 한 명인 도리스 빌(Doris Bill, chief of the Kwanlin Dün First Nation in Yukon and Khelsilem) 의원이 지난 9일 발의한 이 결의안은 “성 지향성과 젠더에 따른 차별 및 성폭력과 따돌림 등 모든 형태의 폭력을 끝내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9개월의 조사 기간을 상정, 세 명의 독립적인 조사관을 선임하여 조직 내의 차별에 대한 조사에 대한 체계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자는 것이 그 요지이다. 또한 9개월의 조사 후에는 조직 내 젠더 폭력 실태, 그 원인 분석, 그리고 정책 제언을 담은 보고서가 공개될 것이다. 정책 제언결의안을 발의한 도리스 빌 의원은 이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퍼스트 네이션 의회가 조직적 젠더폭력과 싸우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나, 몇몇 의원들은 결의안이 요구하고 있는 조사(investigation)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조직의 현 정책들과 절차들에 대한 리뷰(review)로 표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찬반 토론 중 로즈앤 아치버드(RoseAnne Archibald) 의원이 수뇌부의 남성들이 결의안 통과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이후 남성 의원들로부터 비공식적인 경로로 비난을 받은 정황이 알려졌다.

• 참고문헌 •

- CBC(2020.12.09.), “AFN resolution calling for probe into gender-based discrimination sparks heated debate”, <https://www.cbc.ca/news/indigenous/afn-gender-discrimination-probe-resolution-1.5835295> (접속일: 2020.12.19.)
- European Commission(2020.11.25.), “Towards a gender-equal world”, <https://ec.europa.eu/international-partnerships/system/files/factsheet-draft-gender-action-plan-v08.pdf> (접속일: 2020.12.22.)
- HuffPost(2020.12.02.), “Half of People in Territories Report Being Assaulted Since Turning”, https://www.huffingtonpost.ca/entry/assault-rates-canada-territories_ca_5fc82b08c5b61bea2b150a08 (접속일: 2020.12.19.).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국내*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거주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

-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거주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2010년 이전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도 도로명주소·건물번호까지 공개
 -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기관 확대 (제주 국제학교,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관련 실태조사 실시[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12.02]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229

여성가족부, 2021년 예산 1조 2,325억 편성

- 여성가족부는 2021년 예산을 2020년(1조 1,191억 원) 대비 10.1%(1,133억 원) 증가한 1조 2,32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힘.
 - 2021년 예산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자녀돌봄 확대,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12.03.]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393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 안 하면 출국금지, 형사처벌 가능

- 여성가족부는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내동향」 중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주요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임.

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가능
-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가능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12.09.]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414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확대,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성폭력 사건 처리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이번 고시는 그간 내용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성을 판단하던 틀에서 벗어나, 익명성 등 불건전한 서비스 이용 행태와 내용(콘텐츠) 생산을 유도하는 랜덤채팅앱의 기능에 대해 처음으로 청소년 유해성을 심의하고,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앱에는 기술적 안전 장치를 두도록 하여 청소년 보호를 한층 두텁게 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12.09.]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415

안전하지 않은 무작위(랜덤)채팅앱 11일부터 '㉠금'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 채팅앱(이하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가 시행된다고 밝힘.

〈주요 내용〉

- 실명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 대화 저장
 -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결정고시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9.10~12.10)을 둔 바 있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12.10.]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409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인권침해 개선위한 '다문화가족 포용대책' 발표

-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해소와 인권보호,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을 발표함.

〈주요 내용〉

- 주민센터 등 다문화가족 서비스 담당 공무원에 '다문화 이해교육' 의무화
- 국제결혼중개 광고의 성차별·인권침해 행위 규제 등 관리 강화
- 결혼이민여성의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통합 사례관리 실시
-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하여 다문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소득기준’ 등 반영,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12.10.]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423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수립

-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함.

〈주요 내용〉

- 0~1세 영아수당 신설, 영아기 집중투자
- 3+3 육아휴직제 도입, 아빠 육아휴직 문화 정착
- 다자녀가구 지원기준, 2자녀로 단계적 확대
-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
- 가족지원 투자 지속 확대 및 저출산·고령사회 투자예산 재구조화 등
- 신중년의 계속 고용 지원, 기초연금 확대 등 다층소득보장체계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대 등 활기차고 건강한 고령화 지원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12.15.]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436

2021년부터 성범죄자 모바일 고지 본격 시행

-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 대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관련, 1월 5일(화)부터 모바일 고지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힘.
- 성범죄자 전출입 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에 카카오톡으로 고지
- 모바일 고지 미열람자에게는 우편으로 고지
- 일반 국민은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 또는 앱에서 확인 가능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12.31.]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476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 높인다

-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가능
- 비양육부·모에 대한 책임성 강화로 양육비 이행 점차 개선
- * 양육비 이행률 : (‘15) 21.2% → (‘17) 32.0% → (‘19) 35.6% → (‘20.11월) 36.8%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1.05.]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XiyyDeyHfKM5Y4Q0hq8x9FDM.mogef10?mid=news405&bbtSn=70747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법령 시행

-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표시·광고 금지와,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교육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힘.
 - 결혼중개업자의 인권침해 광고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형사처벌 가능
 - 결혼중개 사업장의 폐업·휴업 여부, 행정처분 현황 등 공시항목 확대
 - 결혼중개업자 신규 등록 전 인권보호 및 다문화 수용성 교육 강화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1.08]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7486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327만 명 점검해 성범죄 경력자 80명 적발

- 여성가족부는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성범죄 경력자 80명을 적발했다고 밝힘.
 - 전년 대비 점검인원은 10만 명 늘고, 적발인원은 28명 감소
 - 점검인원 ('19) 317만 명 → ('20) 327만 명, 적발인원 ('19) 108명 → ('20) 80명
 - 적발된 성범죄 경력 종사자는 해임, 운영자일 경우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폐쇄 조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1.14.]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7502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연 840시간으로 확대, 지원비율은 5%p 상향

- 여성가족부는 양육공백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및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한다고 밝힘.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 확대 : 연 720시간 → 연 840시간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비율 확대
 - 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은 5%p 상향, 최대 90%까지 지원
 - 서비스 안전성 및 이용 편의 제고
 -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최대 3년으로 강화, 자격정지 및 취소 이력 정보 제공
 - 주말·야간 등 긴급상황 시에 일시연계서비스 제공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1.19.]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7521

여성가족부, 2019년 기준 국가성평등지수·지역성평등지수 측정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3.6점으로 2018년(73.1점) 대비 0.5점 상승하였고, 지역성평등지수는 76.4점으로 2018년(75.7점) 대비 0.7점 상승하는 등 매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성비(5.3점 ↑), 육아휴직 성비(5.2점 ↑),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비(3.3점 ↑), 4급 이상 공무원 성비(3.2점 ↑) 전년 대비 크게 상승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1.21.]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523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마련

- 여성가족부는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조치 및 사건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이하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힘.
- 이번 지침 표준안 마련은 '2차 피해'를 처음으로 법률에 정의한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이 '19년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서 준비된 것임.
-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장과 조직구성원의 책무 규정과 2차 피해 유형, 사건 처리 절차, 관련자 징계,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제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1.25.]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527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전국 96개 지정

- 여성가족부는 2021년 신규지정 14개소, 재지정 7개소를 포함해 여성친화도시 전국 96개를 지정함.
-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여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시군구를 말하며, 지정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지자체의 참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1.28.]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533

2021년 여성가족부 주요 업무계획 발표

- 여성가족부는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이 뿌리내리고 모두 함께 돌보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둔 「여성가족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함.
-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경단여성 인턴 후 채용기업에 '새일고용장려금' 지급, 3월 '여성일자리대책' 수립
- 아동·청소년 그루밍 처벌 추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특화상담소 신규 운영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부담 경감, 청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청소년 활동기반 개선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2.01]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541

여성가족부, 가족상담전화(1644-6621) 채팅 상담 서비스 시작

-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경험한 사람, 가족 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 '모바일 채팅 로봇(이하 '챗봇'), 채팅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2.10]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566

양성평등위원회,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국가행동계획' 등 확정

- 국무총리는 제12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① 향후 3년간 시행할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3기(21~23) 국가행동계획(안)」과, ②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의 '21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확정함.
-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국가행동계획] ▲(예방) 여성·평화·안보 등 남북협력 관련 과제 신설 ▲(참여) 국방·외교·통일·치안 분야 등 여성 대표성 제고 ▲(보호) 북한이탈 여성 인권보호 강화 및 軍·해외분쟁지역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구호·회복)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생활지원 등
-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성인지교육 필수 편성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본격 추진 ▲새일여성인턴 지원 확대 등 경력단절예방 강화 ▲촘촘한 돌봄인프라 구축 등 일·생활 균형 제고 ▲디지털 성폭력 대응체계강화 등 여성폭력 근절 추진 등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2.19.]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578

디지털 경제에서 여성 고용 확대 모색

-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디지털 경제에서 여성 고용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여성고용 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함.
-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 디지털 기반 시장 확대 등 노동시장 변화에 발맞춰, 미래 일자리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실태 진단과 정책과제 모색을 위해 마련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2.23]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589

지역사회 양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모색

- 여성가족부와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지역 양성평등정책 확산 방안' 토론회를 개최함.
- 이번 토론회는 2019년부터 시범운영 중인 지역양성평등센터의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내 양성평등 정책 확산을 위한 효과적인 전달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2.24]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593

기획재정부 · 여성가족부,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신설

-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2021년 제1차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를 통해 협의회 산하에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힘.
 -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2020.10월 제정)에 따라 설치
 - (구성) 기재부·여가부·행안부·복지부·국토부 등 국장급 공무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 위촉 민간위원 4인 등 총 11인
 - (기능)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평가결과 의결, 성인지 예·결산 제도개선사항 논의 등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2.25.]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602

여성가족부, 청소년부모 지원 근거 최초로 마련

- 여성가족부는 24세 미만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출 청소년’ 용어 변경 및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자녀양육, 생계, 학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24세 미만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가정 밖’이라는 위험상황에 초점을 두고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 변경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 전담기구 설치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2.26.]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609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처벌

-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 등 위해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처벌 근거 신설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로 신분 비공개·위장수사 근거 마련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 공소시효 폐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2.26.]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610

[보건복지부]

즉시분리제도,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 의무화 등 개정 '아동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특히,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거나 조사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보호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가 도입되었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12.03.]

• 참고문헌 •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1466

「모자보건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소득기준 완화와 관련한「모자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을 '20년 12월 18일(금)부터 '21년 1월 27일(수)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힘.
 -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됨.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12.18.]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61992

형법상 낙태죄 개선입법 기한 경과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관련 사항 안내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제시한 개선입법 기한(20.12.31.)이 경과됨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관련 사항을 시행함을 안내함.
 - 129(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 및 유관기관 안내 등 제공
 -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출산 상담 매뉴얼을 전국 보건소에 배포
 - 현행 모자보건법령상 허용범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하면서 헌법 불합치 개선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 예정
 -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약회사 등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허가·심사를 신속하게 진행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12.31.]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4&CONT_SEQ=362829

정부,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

- 보건복지부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했다고 밝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장의 대응체계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고, 신고 접수 후 초기 대응 역량 강화 및 조사 이행력 확보
 - 3월부터 시행하는 즉각분리제도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관련 기관 등 협력 강화
 -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입양가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01.19.]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_T_SEQ=363158&SEARCHKEY=TITLE&SEARCHVALUE=%EC%95%84%EB%8F%99%ED%95%99%EB%8C%80

보건복지부,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피해아동 일시보호 강화방안 모색

- 보건복지부는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즉각분리제도로 인해 분리 대상 아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대응 계획을 공유하고, 시·도 별 상황 및 계획을 점검함.

〈즉각분리제도 개요〉

- 정의 : 지자체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 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 요건
 -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 그 밖에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정부 대응 계획〉

- 분리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
- ‘위기사동 가정보호사업’ 신규 추진 등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02.09]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_T_SEQ=363472

[고용노동부]

2019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발표

-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시·도별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2019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함, 일·생활 균형 지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일, 생활, 제도 및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산출한 점수로 2017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음.
- 2019년 일·생활 균형 지수는 전국 평균 50.5점으로 2018년(50.1점) 보다 평균 0.4점 증가하여 일·생활 균형 수준이 다소 향상된 것으로 파악됨.
- 일, 생활, 제도 및 지자체 관심도 등 영역별로 살펴보면, “일 영역”에서는 초과근로 시간이 감소(13.3시간→12.2시간)하고 휴가 일수가 증가(5.5일→6.2일)하는 등 일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는 개선 효과를 보였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12.30.]

• 참고문헌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816

고용노동부, 2020년 육아휴직 현황 발표

- 고용노동부는 2020년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와 비율이 2019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밝힘.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확산하고 있고,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시행과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20.2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 2020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 대비 23.0% 증가, 전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
 - * (전체 육아휴직 수) '17년 90,110명 → '18년 99,198명 → '19년 105,165명 → '20년 112,040명(6.5% 증가)
 - * (남성 육아휴직자 수) '17년 12,042명 → '18년 17,665명 → '19년 22,297명 → '20년 27,423명
 - *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17년 13.4% → '18년 17.8% → '19년 21.2% → '20년 24.5%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1.02.10.]

• 참고문헌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937